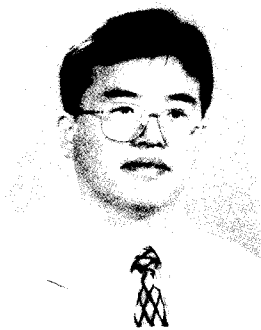


경제전망과 주류산업의 대응 방향



溫 基 云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目 次 ■

1. 실물경기 위축세 지속
2. 수출과 설비투자 급감이 문제
3. 소비 심리도 위축
4. 금융시장, 불안한 안정
5. 원화가치는 절상 압력 상존
6. 물가는 원유와 농수축산물 가격이 관건
7. 불확실성 제거가 급선무
8. 자금시장 안정과 투자·수출 활성화 중요
9. 근본적인 산업 재편 필요
10. 주류산업 내년 중반 이후 회복세 보일 듯
11. 유흥업소에 대한 세율 감면 효과는 크지 않을 듯
12. 주류업체들의 적극적 대응 필요

1. 실물경기 위축세 지속

실물경기가 회복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채 작년 가을 이후 위축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통계청에서 작성되는 경기종합지수나, 각 기관이 작성하는 경기실사지수 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작년 9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경기가 여전히 하강국면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행지수는 노동투입량(전산업), 산업생산, 제조업가동률, 전력사용량(제조업), 도소매판매액, 비내구소비재출하, 시멘트소비량, 수출액, 수입액 등 10개 지표를 종합해서 작성된다. 현재의 경기국면을 판단할 때는 이들 구성지표의 월별 통계에서 계절적 요인과 천재지변 등에 의한 불규칙 요인을 제거한 다음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따라 변동하는 부분을 제외해 작성된 순환변동치를 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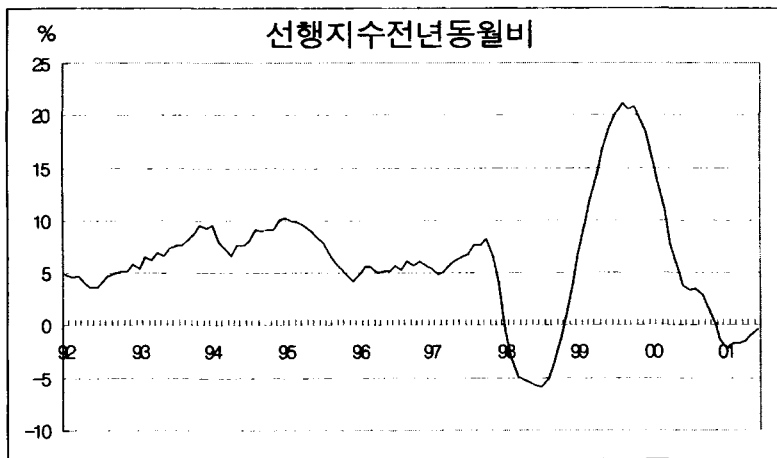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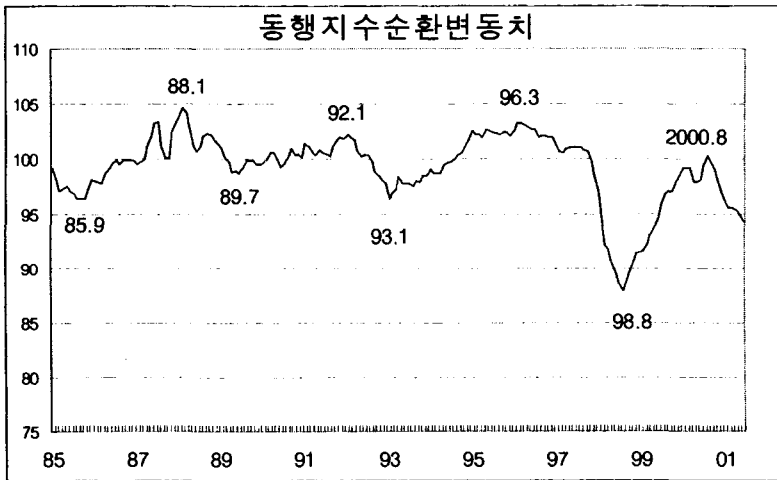
이 순환변동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한국경제는 수축국면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번째 경기수축이 시작된 시점, 즉 경기 정점은 작년 8월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서 '추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정점이나 저점은 실제로 그것이 나타나고 나서 수년이 지나 관련

통계들이 충분히 확보됐을 때 통계청 담당자와 전문가들의 회의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이다.

경제의 앞을 내다보는데 사용되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99년 11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 올 2월에 하락세가 멈추기는 했지만 뚜렷한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있다. 선행지수란 임이직자비율, 중간재출하, 내구소비재출하, 건축허가면적, 건설용중간재생산, 기계수주액, 재고순환지표, 총유동성, 수출신용장내도액, 수출

용원자재수입액 등 10개 지표를 종합해서 작성된 것인데 이것이 전년 동기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가지고 경기의 미래를 판단하고 있다. 선행지수의 상승세가 뚜렷하지 못한 것은 연내에 경기가 회복되기 어려움을 예고해주는 것이다.

올들어 개선조짐이 뚜렷했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나 소비자태도지수(CSI) 등도 하반기 이후 다시 악화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월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주요 실물 경제지표 추이

(전년동기대비, %)

	200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산업 생산	0.1 (1.0)	8.8 (0.9)	6.4 (0.4)	5.6 (-1.4)	2.3 (-0.1)	-2.7 (-1.9)	-5.9 (-1.4)
설비투자추계	-9.2	-4.8	-5.0	-5.8	-5.3	-2.9	-10.3
도소매판매	2.2	1.6	3.6	4.0	4.8	4.1	2.5
수출(통관기준)	4.0	5.1	-2.1	-10.3	-8.7	-14.3	-20.0

※ () 내는 전월대비

BSI는 올 1월에 바닥을 치고 3월에는 100위로 올라서 상승세를 지속했으나 6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8월에는 94로 떨어져 버렸다. 각 기관이 작성하는 소비심리 지표도 최근 다시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이나 소비자의 체감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고 소비자들도 소비를 꺼리게 되기 때문에 경기회복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2. 수출과 설비투자 급감이 문제

최근의 실물경기 둔화는 수출부진과 설비투자 위축에 큰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은 3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이래 감소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올들어 8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 감소했고, PC도 22%나 줄었다. 정보기술(IT) 제품의 수출 부진은 점차 철강 석유 화학 섬유 등 전통제품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경기가 회복될 조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출회복도 당분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경쟁국도 수출이 -20% 전후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중국이 7월에 6% 이상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수출부진은 심각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할 경우 작년 88%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실질경제성장률은 금년에 3% 전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설비투자 급감도 문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4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들은 설비투자를 금년에 작년에 비해 9.3% 줄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기업들이 하반기에 투자를 상반기보다 2.8% 줄일 것으로 계획하는 등 투자심리가 갈수록 얼어붙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계정을 보면 올 2/4분기중 설비투자는 10.8% 감소했다. 그러나 문제는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원자력 설비투자를 제외하면 민간의 투자 감소율은 대폭 커진다는데 있다. 더구나 기업들이 생산능력 확장 투자보다는 보수유지를 위한 투자에 치중하고 있어 향후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것은 미래의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 국내기업들은 대부분 업종에서 공급과잉과 채산성 악화 등 때문에 투자 유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이 그동안 우리가 비교우위를 누려왔던 업종에서 앞으로 대대적인 설비증설을 계획하고 있어 국내기업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제10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주요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2005년까지 대규모 설비증설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면한 각종 규제도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기업활동의 글로벌화와 산업의 융합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과거의 법규나 제도를 가지고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투자를 억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점에서 대기업 집단 지정 완화나 총액출자제한제도 완화 등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 사업기회가 있는 데도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소비 심리도 위축

통계청이나 삼성경제연구소 등의 조사에 따르면 민간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태도지수가 작년 4/4분기를 저점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3/4분기에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의 가계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는 98로 전달(98.9)보다 하락했다. 소비자 평가지수는 작년 12월 106.9에서 올 1월 104.7, 2월 103.7, 3월 101.1, 4월 101.2로 지속적으로 하락한 후 5월에는 97.6으로 99년 5월 (96.4)이후 처음으로 100 밑으로 떨어졌다.

소비자 평가지수 100은 소비를 줄였다는 가구와 늘렸다는 가구가 같은 수준을 나타내고 100에 못미치면 소비를 줄였다는 가구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수가 5월 이후엔 계속 100이하로 최근 소비자들이 소비를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6개월후의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는 102.3으로 전달의 102.5보다 조

금 낮아졌다.

소비위축의 가장 큰 원인은 소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부 구조조정 기업에서의 임금삭감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지만, 증시 침체로 투자자들의 자산소득이 감소한 것이 더 큰 원인이다. 자산소득은 근로소득에 비해 소비성향이 훨씬 높다는 점에서 증시침체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실로 크지 않을 수 없다.

장래에 대한 불안감도 문제다. 경제전반의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언제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할지, 언제 기업이 쓰러질지, 개인이나 기업이 가지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불안해지면 장래를 대비해 현재의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의 소비가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장래에 대한 전망이 그만큼 좋지 않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또 최근 이어지는 금리하락이 소비에 긍정적 요인보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과 이자소득세 등을 뺀 실질금리는 현재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금리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저축보다는 소비에 관심을 더 기울이게 마련이지만 이런 현상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자생활자들의 소득이 줄어 소비위축의 원인이 되고 있다.

4. 금융시장, 불안한 인정

정부는 하반기 만기도래 회사채 34조원중 스스로 상환하거나 차환발행할 수 있는 우량기업과 법정관리, 화의기업 등의 회사채를 제외한 14조원은 회사채신속인수와 비과세고수익펀드, 채권담보부증권(프라이머리 CBO) 등

에 의해 무난히 소화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론과 관련해 몇가지 짚어봐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자금시장 안정이 대부분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회사채신속인수나 채권담보부증권은 산업은행이나 신용보증기관 등 정부기관이 나서도록 돼 있다. 이들 기관의 돈은 결국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을 통한 자금시장 안정 유지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만기 도래 회사채 뿐 아니라 신규로 발행할 회사채까지를 고려한다면 하반기 낙관론은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내년 1/4분기에는 24조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데다, 올 실시된 회사채 신속인수 물량의 상황도 겹쳐 기업들의 자금 상황 부담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금리는 올들어 세 차례 이루어진 콜금리 인하속에서 은행 예금금리가 4%대 후반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의 금리조절 수단인 콜금리의 유도목표는 작년 2월과 10월에 각각 0.25%씩 인상되어 5.25%까지 올라갔으나, 올들어 2월과 7월, 8월 모두 세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인하됨으로써 9월말 현재 4.5%를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도 있지만 현재 금리인하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근본원인이 경제시스템의 문제에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은 추가금리 인하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금리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물가상승과 이자소득세를 고려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앞으로도 경기부진은 한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금리하락세도 좀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폭탄 테러의 영향으로 미국의 금리가 불안해질 경우 국내금리도 불안해질 수 있다.

5. 원화가치는 정상 압력 상존

최근 수년간 원/달러 환율의 추이를 보면 98년에 평균 1,398원, 99년에 평균 1,189원, 작년에는 1,130원을 나타냈다. 그러나 올들어 한국경제의 불안과 엔화약세의 여파로 환율이 다시 급등하기 시작해 4월초 한 때 1,365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환율급등에 대한 외환당국의 개입의지 표명과 엔화가치의 안정세 회복에 따라 그 후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당폭 하락해 9월 중순 현재 1,290원선 안팎에서 소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

환율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도 원화가치 상승세(원/달러 환율 하락세)는 더욱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외화공급이 외화수요보다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외국인 증권 및 직접투자 증가 등이 주요 외화공급원이 되고 있는데, 이는 외채권리금 상황이나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투자 등에 쓰이는 외화수요보다 많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에서의 외화초과공급과 이에 따른 원화절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정책을 취해 왔고 그 결과 외환보유고가 1,000억달러 가까이까지 증가했으나, 외환보유고를 무작정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화는 절상 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더구나 미국에서의 동시다발적인 폭탄테러 사태로 달러화 가치가 약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상대적으로 원화가치를 높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환당국은 외화유입 시기를 조절하고, 외채상환 등을 통해 국내외화를 적절히 밖으로 빼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도 외환당국이 원화절상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깨닫고 원화절상에 대비하기 위한 체질구축에 전념해야 한다.

6. 물가는 원유와 농수축산물 가격이 관건

물가는 올들어 8월까지 전월대비 누계로 3.5%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전월대비 물가상승률은 5월 이후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8월에는 한달 사이에 0.5%포인트나 올랐다. 홍수 등의 여파로 농수축산물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다만 곡물 이외 농산물이 제외되는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비교적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는 물가가 대체로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부진으로 수요면에서의 물가압력이 거의 없는데다, 비용측면에서도 환율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요금은 택시요금 등이 인상되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시기 조정 등의 시책에 힘입어 2/4분기 이후의 안정세를 대체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폭탄 테러 사건의 영향으로 유가가 급등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물가불안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을 이사철이 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월세가 불안한 움직임을 나타낼 소지가 충분히 있다. 또 앞으로 태풍이 엄습할 경우 농수축산물 가격이 올라 물가도 불안해질 수 있다.

7. 불확실성 제거가 급선무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증시는 살아나지 못하고 설비투자도 회복되고 있지 못하는 등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올들어 금리를 잇따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 금리가 실질 제로 수준으로 떨어지고 과거 10여년간 120조엔이 넘는 재정자금을 펴부었는데도 장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금리인하나 재정책대만 가지고 실물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와 경제체질 강화다. 이것이야말로 대외 여건의 불투명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를 회복케도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정책당국은 경기부양 등 미봉책에 신경쓰기 보다는 근본 문제 해결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근거해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상시구조조정 체제의 정착은 불확실성 제거와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업신용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부실기업을 조기발견하고 채권금융기관의 효율적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8. 자금시장안정과 투자·수출 활성화중요

하반기의 경우 4/4분기에 집중 도래하는 회사채만기 물량(21조원)에 대비할 수 있는 대

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과제다. 특히 회사채신속인수 등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어려워지는 내년 이후의 자금시장 안정에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당장 내년 1/4분기에는 24조엔의 회사채만기 물량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채신속인수제도가 종료되면서 회사채 만기물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당초 금년 상반기까지만 적용하려 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내년까지 연장해서 적용하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이것이 투자를 활성화하는데는 매우 제한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불확실성 제거와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가 더 중요하다. 특히 기존 중화학공업에서는 공급과잉과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으로 설비투자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미래 유망산업에 기업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최근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한국제품이 경쟁국 제품에 밀리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나 정부가 수출부진의 원인으로 세계경기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상품의 경쟁력 확보와 시장개척 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 수출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수출채산성도 크게 악화되고 있으므로 제값받고 팔 수 있는 고급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9. 근본적인 산업 재편 필요

국내산업의 문제는 구조적인 성격이 강하다. 후발국들이 전통제조업에서 대대적인 설비증

설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정부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13개 업종의 설비증설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업계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전통제조업은 하루빨리 고부가가치 쪽으로 재정비하고, 동시에 유망산업의 발굴과 투자에 힘을 결집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가 경제성장을 등 단기적인 경기지표에만 집착해 경기부양에만 매달린다면 단기적인 경기호름에 일회일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경제의 장래도 없을 것이다.

10. 주류산업 내년 중반 이후 회복세 보일 듯

현재의 경기상황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것은 비내구소비재 출하다. 주류는 대표적인 비내구소비재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기가 앞으로 한동안 수축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당분간 주류산업의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주류는 사람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불요불급한 재화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소득에 여유가 있으면 주류소비는 크게 늘어나지만 경기가 나빠 소득이 변변치 않게 되면 주류소비는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올 안으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내년 중반 이후에나 바닥을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류소비도 그 때까지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가격이 비교적 낮은 소주나 맥주 등의 소비는 경기변동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겠지만 포도주 위스키 등 가격이 비교

적 높은 주류는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1. 유흥업소에 대한세율 감면 효과는 크지 않을 듯

주류소비와 관련해 관심을 모으는 것은 룸살롱, 카바레, 나이트클럽등 유흥업소에 대한 세율 인하 방침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유흥업소 매출액의 20%까지 부과하던 특별소비세를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특별소비세가 폐지되면 특소세의 30%까지 부과됐던 교육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유흥업소 사업주들은 앞으로는 매출액의 10%만 부가가치세로 내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억원인 유흥업소의 경우 현재는 매출액 1억원에 대해 특별소비세(20%) 2,000만원, 특소세의 30%가 부가되는 교육세(6%) 600만원, 매출액과 특별소비세 부가세를 합한금액인 1억2,600만원의 10%가 부가되는 부가가치세 1,260만원등 총 3,860만원의 세금을 내야했다. 그러나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이 업소는 부가가치세(10%) 1,000만원만 내면 되게 된다.

유흥업소 사업주들은 1억원의 매출을 올렸을 경우 2,860만원의 세금을 절감하는 셈이다. 정부는 세율은 감면되지만 세금액은 줄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정부는 유흥업소가 과중한 세부담으로 인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세원관리를 강화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류카드제도를 도입해 유흥업소가 주류를 구입할 때 반드시 카드를 사용하도록 해 세원을 확실히 챙기기로 했다.

유흥업소에 대한 제도변화가 주류소비에 미

칠 영향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주류카드제 도입이 주류거래를 위축시키는 측면이다. 카드제가 도입되면 주류거래 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는 이전에 비해 주류거래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유흥업소에 대한 세금감면은 유흥업을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는 주류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여겨진다. 유흥업소가 늘어나고 세금감면이 소비자들에게 까지 혜택을 미친다면 이는 주류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유흥업소에 대한 제도변화가 주류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 주류업체들의 적극적 대응 필요

전반적으로 국내경기의 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주류업체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에서 발생한 폭탄테러 사건이 세계경기와 국내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대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내실있는 경영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중인 정부와 채권단의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에서 부실징후 기업의 중요한 판정 기준의 하나가 이자보상배율이다. 이는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값인데 이것이 1이 안되는 기업, 다시 말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부실징후 기업으로 판정돼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방침으로 돼 있다. 올 1/4분기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체중 38.2%의 기업이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낮아 경영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제조업체들의 평균 이자보상배율이 1.5로 미국이나 일본의 3.5 정도보다 훨씬 낮은 것도 국내기업이 재무구조를 더욱 개선할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또 자금난이 다시 도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도 있다. 특히 신용등급이 BB급 이하인 투기등급 기업들의 경우 현재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 제도가 없어지게 되

면 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므로 신용등급을 높히는 것과 함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다품종소량생산 체제를 갖추어 유연한 상품 전략을 쓸 필요도 있다. 한 가지 브랜드에만 매달려 소비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상품개발과 함께 브랜드 이미지를 높히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것이 시대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전략이다.

My wife and I tried two or three times in the last 40 years to have breakfast together, but it was so disagreeable we had to stop.

나의 처와 나는 지난 40년 동안에 아침 식사를 두서너 차례 같이 하려 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그만두고 말았다.

- Winston Churchill -